

현역 기득권 그대로 혁신 빠진 '공천혁신'

새정치 내년 총선 룰 발표

시행 세칙 논란 여지 커

정치신인 진입장벽 여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을 상징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등 과거 공천 룰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특히 여성의무공천 적용 기준과 전략 공천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등의 구성과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도 최종 확정되지 않아 시행 세칙을 놓고 논란의 여지도 크다. 새정치연합 공천 룰에 대해 조명해보자.

◇경선 선거인단 비율=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 후보 경선을 '국민 60%+권리당원 40%'의 비율로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 경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노 그룹에 유리한 룰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원혜영 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100% 여론조사 의존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당원의 몫도 40%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당무위에서 당헌에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로 명시돼 있는 선거인단 비율을 국민 60% 이상, 권리당원 40% 이하로 개정하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선 안이 최고위원회의의 인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중앙위 및 당무위를 최종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세칙 논란=굵직한 경선 룰은 정해졌지만 시행 세칙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의무공천을 두고도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적용할 것인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호남과 제주가 1개 권역으로 적용된다면 10명 이상의 후보를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위원 선임과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전략공천을 30%에서 20%로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는 "과거처럼 당의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공천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율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탈당 전력에 대한 심사 점수 5% 감점 방침도 탈당 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기득권 내려 놔야=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 당 내외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공천 룰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축소 방안이 보이지 않아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에서는 경선 3개월 전까지 가입한 권리당원을 인정하고 공천심사위에 외부 인사를 50% 이상 구성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제 등의 시행 세칙 보완을 통해 과연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 놓느냐가 공천 혁신의 성패를 결정 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부메랑 사정' 칼끝 어디로... 숨죽인 정치권

성완중 리스트 수사 항방 촉각

정치권을 뒤흔든 '성완중 리스트' 파문은 적어도 13일까지는 '부메랑 효과'로 비쳐지는 분위기다.

불과 한 달 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정 정국의 선봉에 섰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류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이 리스트에 대거 거명되면서 '부메랑 효과'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친박 겨는 수사 '력비공' 될 수도... 非朴·野도 불안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호사자들은 "친박계가 친이(친이명박)계를 치려다 부메랑을 맞았다"는 검증되지 않은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처럼 리스트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가장 난처한 상황에 빠진 쪽은 주류 친박이지만, 여권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나 야

당 역시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면 이번 사건이 '부메랑'이 아니라 어디로 될지 모르는 '력비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지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폭넓게 교분을 쌓아온 '마당발 기업인'이고, 정권 핵심들에 거액을 줬다고 거리낌 없이

주장한 성품 등으로 볼 때 이번엔 지목된 친박 주류를 제외한 다른 정파들도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옛 자유민주연합에 1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성 전 회장을 '총청권의 박연차'로 부를 만큼 총청관에서 성 전 회장과의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지 않은 유력 인사는 없다고 봐도 무리는 게 총청 지역의 원들의 전언이다.

박연차 전 대광실업 회장은 PK(부산·경남) 정관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인연을 맺거나 유착하면서 전방위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감된 기업인이다. 지난 2008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친노무현)계 인사가 주로 대상이었지만 수사망이 넓혀지면서 박연차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도 뒤서리를 맞았다. 이번 '성완중 리스트' 수사로 현재는 친박 주류가 표적이 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200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 2007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

여권 비주류인 친이계도 성 전 회장과 관계가 없지 않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사를 통해 재가하리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를 넘나드는 '성완중 인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운영하던 대이건설이 헬신 당치가 큰 경남기업을 인수·합병한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이란 점을 주목하는 인사들도 있다. /연합뉴스



리스트 남기고 잠들다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13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고인의 부모 합장묘 옆에 안장된 가운데 추도객들이 꽃잎을 흩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평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서 회의를 이끈다.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밀 어려운 일인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장 (의견이) 접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측이 정부의 재정 분석 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며 협력을 예고했다.

더욱이 최근 '성완중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수사팀 "리스트 메모 성완중 전회장 자필 맞아"

문무일 수사팀장 "어떤 예외도 없이 철저히 수사"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기존 경남기업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넘겨 받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했다.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어떤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기존에 자원외교 의혹 사건의 하나로 경남기업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이날 넘겨받았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경남기업 압수수색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등을 추적한 계좌 추적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도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메

모('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필적감정도 대체로 마무리됐다. 문 검사장은 "(필적)감정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들었다"고 말해 성완중 리스트가 성 전 회장 본인 작성의 메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수사팀은 문 검사장과 부팀장인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특수3부 소속 검사 6명, 특수1부 소속 검사 1명 등 10명의 검사로 꾸려졌다.

문 검사장은 "최대한 검토는 빨리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모에 없는 다른 인물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

는다는 질문에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바른 길로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남기업 분식회계 사건 등 기존의 특수1부 수사 대상 중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과 무관한 사안은 특수1부가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과 대선 기간인 2011년~2012년에 유력 정치인 4명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를 우선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제8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5. 9(토) ~ 10(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사전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허니문 상품 예약 시 최대 140만원 혜택 제공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원 권 증정

하나허니문 박람회 추천 상품

클래식 하와이 (오하우) 6일, 7일

총상품가 2,620,000원~

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4월 ~ 6월 토/일/월

특 전 : 동반자 or 사전예약 할인, 쌍당 최대 40만원 할인

무료 룸 업그레이드(파살 오션뷰 → 오션프론트)

몰리네시안 민속춤 및 와이키펠레 프리미엄 아울렛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보험료,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 경비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지불할 수 있으며, 별도 지불하더라도 가이드가 없습니다. (내역) 내역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택경비 선택경비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측의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관광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설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통신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처리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참여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하십시오. ■여행 유의 사항 1.여행 유류 2.여행 지체 3.불수 견고 4.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